



국제 농업 정보: 일본



1 논 메탄가스 배출 삭감 지원 외¹⁾

□ 논 메탄가스 배출 삭감 지원

- 농림수산성은 2022년도 예산 중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교부금으로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산지 활동을 지원함.
- 메탄은 토양 내 메탄 생성균에 의해 물과 유기물을 원료로 만들어짐. 메탄 발생을 줄이려면 중간물떼기 기간을 관행보다 1주일 정도 늘려야 함.
 - 농연기구가 전국 8개 현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중간물떼기 기간보다 1주일 정도 연장하면 메탄 발생을 약 3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쌀의 등숙비율이 향상되어 단백질 함량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는 등 품질도 향상되었음. 중간물떼기 기간을 늘리는 것은 기존 작업에서 추가적인 작업이 발생하지 않아 노동력 부담이 없이 대응 가능함.
- 유기물을 원료로 하는 메탄 생성균을 막기 위해 볏짚을 땅에 넣는 시기를 봄에서 가을로 바꾸는 가을 갈이(추경)를 하면 논에 물을 대기 전에 볏짚이 분해되어 메탄 발생이 약 50% 감소함.
- 이러한 활동의 지원 대상은 농업인, JA, 도도부현 등으로 구성된 지역 협의회로, 중간물떼기 연장 등 친환경 재배기술과 자동 물관리 시스템 도입 등 노동력 절감에 이바지하는 기술 도입 등을 지원함.
 - 지원 상한액은 300만 엔(두 가지 친환경 재배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360만 엔)으로 검증 경작지 및 기계, 시설 임대 경비, 자재 구매비 등에 활용 가능함.

1)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水田からのメタン排出削減 中干延長・秋耕など支援・みどり戦略交付金”(2022.2.15.), “農作業死亡事故 10万人当たり10.8人 過去最悪-2020(令和2)年”(2022.2.16.)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jacom.or.jp/nousei/news/2022/02/220215-56906.php>, <https://www.jacom.or.jp/nousei/news/2022/02/220216-56938.php>).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지원 전제조건은 협의회에서 친환경 재배체계 검증과 재배 매뉴얼 작성, 산지 전략 책정과 정보 안내 등 모든 대응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임.
- 온난화 방지를 위한 바이오탄 이용도 지원 대상 기술임. 목탄이나 대나무탄 등 바이오매스 유래 숯은 토양 속에서도 잘 분해되지 않아 효율적인 탄소 저류가 가능함.
- 바이오탄을 농지에 사용함으로써 토양의 통기성, 투수성, 보수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pH 상승에 의한 산성도 교정 효과도 있음.

□ 2020년도 농작업 사망사고 추이

- 농림수산성은 2022년 2월 15일, 2020년 농작업 사망사고 추이를 발표하였으며, 2020년의 농작업 사고 사망자 수는 270명으로 2019년보다 11명 감소함.
 - **(작업별)** 농기계 작업 186명, 농업용 시설 작업 8명, 기타 작업 76명, 기계사고 비율 68.9%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보다 3%p 증가
 - **(연령별)** 65세 이상 84.8%(229명)
 - **(성별별)** 남성 85.9%(232명), 여성 14.1%(38명)
 - **(기종별)** 승용형 트랙터 81명(30%), 보행형 트랙터 26명(9.6%), 농업용 운반차(경트럭포함) 15명(5.6%)
- 사망사고는 2020년 8월에 51명(18.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월, 4월, 6월 순임.
- 농작업 사망사고는 농업 종사자 10만 명당 10.8명으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하였으며, 2017년 10.1명에서 2018년에는 9.5명으로 감소했지만, 다시 상승하였음. 산업별 종사자 10만 명당 사망사고는 전체 산업에서는 1.2명,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건설업에서도 5.2명 수준이며, 2017년 6.5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농작업 안전이나 사고 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사고가 감소하지 않아 농림수산성은 농업인·농업인 단체, 노동 안전 전문가, 농업 기계 관련 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한 농작업 안전 검토회를 설치해 2021년 5월에 중간 결과 발표를 시행함.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2017년 농업 기계작업으로 211명이 사망하여 2022년까지 사망자 수를 2017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승용형 트랙터의 전도나 추락에 의한 사고 비율이 가장 높지만, 이는 안전벨트 착용을 통해 사망률을 1/8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음. 검토회에서는 안전벨트 착용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음이 울리는 경보장치 설치 등을 요구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2.2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관계 인구 증가 목표 설계를 위한 검토 추진 외2)

□ 관계 인구 증가 목표 설계를 위한 검토 추진

- 일본 국토교통성은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지방 유지를 위해 특정 지역과 교류를 하는 관계 인구 증가를 목표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함.
 - 농업 현장을 포함하여 인재 부족에 직면하고 있는 지방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업 및 행사에 관여하는 등 지역에 더욱 깊게 관련성을 맺는 인구 확대를 목표로 함.
- 국토교통성은 현재, 국토 장래상을 담은 국토 형성 계획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방 인구감소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과제로 삼았음.
- 고령화나 도시로 이동 등에 의해 지방 인구가 줄어 농사일이나 지역 행사 등을 유지할 인력 확보가 어려워짐.
- 반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원 회귀 경향(귀촌)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정주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깊게 관계성을 맺는 사람을 늘리고자 함.
- 국토교통성 추계에 의하면, 특정 지역에 방문하는 관계 인구는 2020년에 1,827만 명으로, 18세 이상 국내 인구의 약 20% 수준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중 참여도가 높은 새벽시장 출점 및 각종 자원봉사 참여 등 직접 기여형 관계 인구는 628만 명, 농작업 지원 등 노동형 관계 인구는 109만 명으로 총 737만 명으로 관계 인구 중 40%를 차지함.

2) 일본농업신문 “關係人口増へ目標値「地域に深く関わる」重視 具体化に向け検討 国交省”(2022.2.28.),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農水省が農地の荒廃防止へ 2022年度から支援対象に“植林”追加”(2022.2.24.)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agrinews.co.jp/news/index/60310>, <https://www.jacom.or.jp/nousei/news/2022/02/220224-57098.php>).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지역에 깊게 관여하는 사람을 포함한 관계 인구 증가를 위해, 국토교통성은 목표치를 설정하고자 함. 해당 계획을 검토하는 전문가 회의에서도 관계 인구는 새로운 계획의 중요 요소이며, 지역 활동에 흥미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유입을 유도할지를 중요한 포인트로 인지하고 있음.
- 구체적인 목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임.

그림 1. 관계 인구 추계치 |



□ 농지 황폐 방지를 위한 나무 심기 지원

- 농림수산성은 후계자 부족 등에 의한 농지 황폐화를 막기 위해, 2022년부터 토지이용 지원 대상 사업³⁾에 나무 심기도 추가하여 농지 임지화를 지원하기로 하였음.
- 본 사업은 농림수산성이 2021년도부터 시작한 ‘최적 토지이용 대책(最適土地利用対策)’ 중 하나임.
 -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지 활용에 의욕이 있는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저비용 토지이용 지원사업으로 방목이나 밀원작물 재배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왔음.
 - 2021년도에는 홋카이도, 오이타현 등 전국 5개 지구(地區)에서 본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특산물 재배 및 방목 등을 위한 준비를 진행함.

3) 지역 커뮤니티 유지와 농산어촌 활성화 및 자립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역 단위 논의를 통해 중요한 지역 자원인 농지를 유효 활용 및 조방적인 이용을 지원하여 토지이용 최적화 추진함.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농림수산성은 이와 함께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대상 사업에 야생동물 완충대 기능을 가진 계획적인 나무 심기를 추가해 농지 입지화도 지원하기로 함.
 - 농지 장기적 이용 기본 방향을 논의하는 검토회에서, 인구감소 등으로 농지 보전이 어려운 지구도 생겨날 것을 고려하여 야생동물 피해 대책을 포함한 계획적 나무 심기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 것을 확정하였음.
- 사업대상은 토지 활용 대상 면적이 10ha 이상 있는 지역이며, 사업 주체는 시정촌(기초자치단체) 및 JA, 지역 운영 조직 등임.
 - 지구에서 협의회를 설립하여 지역계획을 작성하고 시정촌에 신청하여 보조금 지급 확정 후 방목이나 나무 심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최적 토지 이용 계획을 책정함.
 - 나무 심기 등의 경우 협의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10a당 5천 엔, 토지 정비 등 하드웨어 사업에 10a당 3만 6,000엔을 상한으로 보조금을 지급함.
- 농림수산성은 2026년도까지 전국 100곳에서 본 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유지 강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3.0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지법 개정을 통한 농지 이용자 확보 추진 외⁴⁾

□ 농지법 개정을 통한 농지 이용자 확보 추진

- 일본 농림수산성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농지 관련법 개정안에 농지 이용자 확보를 위한 조치를 담았음.
 - 이는 농지법에 명시된 농지 권리 취득 시 필요한 하한 면적 요건을 폐지하여 다양한 인재가 농지를 취득하기 쉽게 하도록 하고자 함.
 - JA에 의한 농업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농협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 등의 절차 완화를 추진하고자 함.
 - 농업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 개정을 통해서도 인정농업자와 신규 취농인을 지원함.

4) 일본농업신문 “農地取得の下限廃止・多様な就農後押し・農水省法改正案”(2022.3.4.), “人・農地プラン「農業利用」「保全」に区域分け 農水省方針”(2022.2.24.)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agrinews.co.jp/news/index/61103>, <https://www.agrinews.co.jp/news/index/60476>).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나 채초방목지 권리 취득 시 하한 면적을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50a, 홋카이도 2ha로 규정함. 한편, 2009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 조건에 맞춰 원칙보다 하한 면적을 낮추는 것을 허용하였음.**
 - 핵심 경영인이 부족한 지역에 유휴농지가 많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하한 면적을 10a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음. 평균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0a 이상으로 설정함. 이를 기반으로 전국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의 약 70%가 하한 기준을 낮췄음.
 - 연간 150일 이상 농작업에 종사하는 등 면적 이외의 요건은 유지함.
- **법 개정을 통해 더욱 유연하게 하한 면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과 다른 일을 함께하는 반농반X를 비롯해, 다양한 인재의 취농을 촉진함.**
- **JA가 농업경영을 할 경우, 현행 농협법에서는 정조합원 2/3 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함.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는 총회에서 2/3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게 함. 기존에도 정조합원 1,200명이 넘는 JA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대상을 확대함.**
-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자금을 인정농업인을 위한 자본성 후순위론(資本性劣後ローン)을 도입하기 위해 농업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을 개정함. 기존의 공고 자금 대비 원금 반제를 유예하는 거치 기간을 큰 폭으로 늘림. 이를 통해 재무 기반을 강화하여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빌리기가 용이해짐.**

〈농지 관련 법 개정안에 담긴 농지 이용자 확보·육성을 위한 조치〉

〈농지 취득 시 하한 면적 조건 폐지〉

- 도부현 50a, 홋카이도 2ha 폐지
 - ※ 현재도 지역 실정에 맞춰 면적을 줄일 수 있음. 약 70% 시정촌에서 축소 완료
- 농지법 개정

〈JA에 의한 농업경영 촉진〉

- JA 농업경영에 필요한 조합원의 동의 절차를 완화, 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조합원 과반이 참석한 총회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변경
- 농협법 개정

〈농업경영·취업 지원 센터 준비〉

- 각 도도부현이 정비하여, 취농부터 정착, 그 후 경영 개선까지 일괄하여 지원
- 농업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 개정

〈인정농업자 재무 기반 강화〉

- 일본정책금융공고 자금을 자본성 후순위론(劣後ローン) 도입, 부채가 아닌, 자본에 준하여 취급 재무 기반을 강화,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리기 쉬움.
- 농업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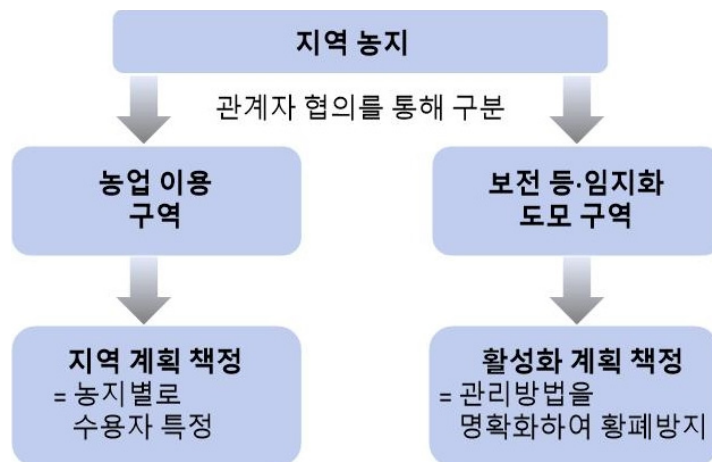


국제 농업 정보: 일본

□ 사람·농지 플랜 책정 방식 확정

- 일본 농림수산성이 법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 농지 이용 장래상을 설정하는 사람·농지 플랜(지역계획)에 대해 각 지역 책정할 때의 추진 방침을 확정하였음.
 - 지역계획 수립 전에 농가 협의를 통해 지역 농지를 농업으로 이용하는 구역과 보전 관리하는 구역으로 구분함. 농업으로 이용하는 구역에서는 농지 한 필지마다 장래 이용자를 명확히 하여 지역계획을 책정함. 보전 관리하는 구역은 계획적인 방목 및 임지화를 촉진하여 황폐화를 방지함.
- 법정화에 따라 사람·농지 플랜은 지역계획이라는 명칭으로 함. 시정촌은 우선, 농가와 농업 위원회, 농지 중간 관리 기구(농지뱅크), JA, 토지 개량구 등의 관계자 회의를 설치함. 장래 농업 기본방향과 작부 품목, 농지 이용자 확보를 위한 대책 등을 협의하여 지역의 농지를 ① 농업 이용구역, ② 보전관리 구역으로 정리함.
- 이를 기반으로 농업으로 이용하는 구역에서는 시정촌에 지역계획 책정을 촉구함. 지역계획에서는 농지마다 장래 이용자를 확정하는 목표 지도 설정도 요구됨. 계획 책정은 일률적 진행이 아닌 관계자 협의가 완료된 지역부터 진행될 예정임.
- 이번 국회에서 농업경영 기반 강화 촉진법 개정을 통해 이런 대응을 추진하고자 함. 개정법은 2023년 4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함. 목표 지도를 포함한 지역계획은 같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작성이 요구되며, 주지 기간과 합하여 3년 정도 준비 기간을 둬.

| 그림 2. 사람·농지 플랜(지역계획) 책정 흐름 |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2.03.1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